



주간통일정세 2008-31(2008.07.28~08.03)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8-31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군부대 예술공연 관람(8/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군 제757부대의 예술선전대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 김 위원장은 현철해·리명수 대장, 장성택 당 행정부장, 리용철·리제강 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 등 군 지휘관 및 당 간부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한 뒤 예술선전대원들을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보도
-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군인들에 대한 사상교양에서 커다란 감화력과 높은 호소성을 가지고 있는 예술선전은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예술선전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을 주문
- 김 위원장은 앞서 ‘오중흡 7연대 칭호’를 받은 해군 제155군부대 예하 구분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

● 김정일, 군부대 시찰(8/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군 제1622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
- 김 위원장은 부대를 방문해 훈련상황을 지켜본 뒤 “전투훈련을 강화하는것은 부대의 전투력을 높이는 기본담보”라고 말했다고 통신은 보도, 김 위원장은 시찰을 마친 뒤 부대에 망원경과 기관총, 자동보총을 선물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했으며, 이번 방문에는 현철해·리명수 군 대장이 동행

나. 정치 관련

● 北, ‘금강산 사건’ 주민선전 시작(8/3,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통신)

- 북한 당국이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발생(7.11) 20여 일만인 3일 공식 보도매체를 통해 주민들에게도 자신들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사건을 알리기 시작
- 조선중앙TV는 3일 오전 아침 방송에서 배경 화면 없이 여성 아나운서가 ‘조선인민군 금강산지구 군부대대변인 특별담화’ 내용을 읽는 형식으로 금강산 피살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보도, 중앙TV 아나운서는 담화 전문을 소개하며 북한군이 향후 대응 조치로 제시한 불필요한 남측 인원 추방, 남측 인원·차량 군사분계선 엄격 통제,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한 강한 군사적 대응 등을 엄숙한 목소리로 강조
- 조선중앙방송도 3일 아침 같은 내용을 처음 소개했고, 조선중앙통신



과 평양방송도 일제히 이 소식을 내보낸 이후 뉴스시간마다 반복 보도

- 북한은 담화에서 남측이 “마치 우리 군인이 군사통제구역에 들어온 침입대상을 이룬 새벽에 산책하는 비무장관광객인줄 뻔히 알면서도 ‘과잉대응’한 것처럼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다”며 사건 발생지역이 “우리 군대의 엄격한 군사적 대응조치가 정황에 따라 즉시적으로 취해지는 최전방지역”이라고 강조한 뒤 “넘어서는 안될 경계울타리를 벗어나 관광객이 우리측 군사통제구역 안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죽음을 당하는 일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변
- 아울러 “우리 군대가 취한 정정당당한 군사적 조치가 북남사이에 체결한 금강산관광법이나 관광지구의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를 난폭하게 위반한 것처럼 법석 고아대고 있는 이유”를 “북남관계를 더 험악한 지경으로 몰아가려는 (남한 정부의) 고의적인 반공화국(반북) 대결책동” 때문이라고 주장

● 민주조선, ‘10·4선언’ 삭제 비난(8/1,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의장성명에서 10·4선언 관련 서술이 나중에 삭제된 것은 남한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10·4선언을 반대하는” 행위라고 비난
- 신문은 ‘10·4선언을 반대하는 역적 행위’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ARF 의장성명에 포함됐던 금강산 피살사건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이명박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부정하고 반대하면서 북남대결을 추구”하는 것을 “국제무대에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드러내놓았다”고 주장
- 신문은 이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10·4선언의 이행문제를 논의하자고 밝혔지만 “국회라는 공식 장소에서 한 자기 발언마저 국제무대에서 공공연히 뒤집어엮었다”며 “이제는 아무리 콩으로 메주를 쑤다고 해도 믿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

● 北식량난은 외부탓, 살길은 자력갱생(7/24, 민주조선; 7/26,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 “이제는 어디서 쌀을 가져 올 데도 없고 또 누가 가져다 주지도 않는다.” 심각한 식량난을 겪는 북한의 당국이 최근 자신들의 식량난 책임을 외부요인에 전가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세계적인 식량 위기상황과 그 심각성을 언론매체들을 통해 반복 전파하는 가운데 ‘자체 해결’을 강조하면서 하는 주장(식량확보보다는 식량난 이유 설명에 주력)
- 북한 당국은 특히 식량문제 해결이 “단순한 경제실무적 문제이기 전에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운명과 관련된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체제와 연결시키기도 함.
- 조선중앙방송과 조선중앙TV는 7월 26일에만 ‘세계적인 식량위기의 연쇄적 후과’, ‘세계적 식량위기 엄중’, ‘식량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



제적 움직임’, ‘중국, 식량절약 사업’ 등을 방송

- 7월 24일 북한 농업성 최현수 부국장도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과 인터뷰에서 국제 곡물가의 급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이제는 식량을 주겠다는 나라도 없고, 줄 형편에 있는 나라도 없다”며 “믿을 짓은 오직 매개 나라 인민 자신의 힘 뿐”이라고 강조

● **北최고인민회의 선거, 11월로 연기(7/30,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이 올해 5년의 임기가 끝나는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를 8월 초순께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11월로 연기했다고 대북 지원단체인 좋은벗들이 30일 주장
- 좋은벗들은 소식지에서 연기 이유는 “9월 9일 정권 수립 60돌을 맞아 기념행사를 치르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

다. 경제 관련

● **北도 오징어 풍년(8/1, 오늘의 북한소식)**

- 북한의 동해안에서도 올해 오징어 풍년이 들어 식량난에 허덕이는 내륙지방 사람들이 너도나도 오징어잡이를 위해 동해로 몰려들고, 여자들은 오징어를 나르거나 말리는 샅벌이에 나서고 있다고 대북 인권지원단체인 ‘좋은벗들’의 북한 소식지가 보도
- 소식지는 북한에서 “올해는 제일 못 사는 사람과 꽃제비도 낙지를 배불리 먹는 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징어 풍년이라며 7월 초부터 동해안에서 오징어 수확량이 증가해 함경북도 라진, 청진, 김책, 함경남도 신포, 강원도 원산 등 동해안 일대에는 오징어잡이 배를 타려는 외지인들로 북적이고 있다고 설명
- 소식지는 오징어 160마리를 말려주면 20마리를 노임으로 받고, 비가 오는 날엔 100마리 정도 말려줘도 20마리를 갖게 되는데, 이를 팔면 하루 일당 5천원~8천원을 손에 쥌 수 있다고 소개하고 오징어 잡이 배를 타면 3개월간 북한돈으로 수백만원까지 벌 수 있고, 오징어를 운반하고 말리는 작업을 해도 1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설명

● **WFP평양소장, 2주내 한국에 대북 식량지원 요청(8/1, 연합)**

- 장 피에르 드 마저리 WFP 평양사무소장이 “앞으로 2주내 한국을 포함한 각 국에 대북 식량지원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힘.
- 드 마저리 소장은 7월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실사 결과를 발표한 뒤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조속히 북한에 식량을 공급해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하고 특히 “다가오는 몇달동안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추수를 앞둔 시점에서 각 가정의 식량이 바닥을 드러내



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

- 그는 WFP가 지난 6월 북한에서 8개도, 53개군을 방문해 350건 이상의 면접을 통해 식량수요 조사를 했으며 “2004년 이래 현지실사중 가장 포괄적인 것”이고 “조사 결과에 상당히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
- 올해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해 그는 통상적으로 한해 54만t이 부족하는데 2007년 427만t이 생산돼 11만t이 부족하며, WFP 지원분 8만t, 미국과 중국의 2008년 식량지원분 각 20만t을 감안하면 65만t이 모자랄 것으로 추산
- 드 마저리 소장은 북한 식량난의 원인으로 2년 연속 수해, 외부로부터 식량지원 감소와 더불어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북한 국내의 곡물 운송난을 꼽고 “올해 기름값이 50% 이상 올라 곡물이 충분히 생산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운반하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

● **北, 내각은 黨의 경제정책 집행기구(7/24,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내각의 결정과 지시가 “당의 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법적 문건”이라며 “조항별로 어김없이 집행”할 것을 강조
- 신문은 ‘내각의 결정과 지시 집행에서 책임성을 높이자’는 사설에서 “내각은 나라의 경제사업 전반을 지도 관리하는 경제사령부”라면서 “당의 노선과 경제정책이 성과적으로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하는 것은 결국 내각의 결정, 지시가 어떻게 집행되는가 하는 데 달려 있다”고 강조
- 신문은 “법적 성격”을 띠는 내각의 지시와 결정을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지도 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수시로 제기되는 문제들에 매달려 땀띠기식(임시방편)으로 일할 것이 아니라 경제사업을 깊은 연구와 구체적인 타산(계산) 밑에 전망성있게 설계하고 힘있게 전개해야 한다”고 덧붙임.

● **농업증산은 심각한 정치문제(7/24, 민주조선; 조선중앙방송)**

- 북한 농업성의 최현수 부국장은 “오늘 농업생산을 늘리는 문제는 단순한 경제실무적 문제이기 전에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운명, 더 나아가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운명과 관련된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주장, 최 부국장은 북한의 농업생산의 저하의 한 원인으로 자연재해 외에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고립압살 책동”을 들기도 함.
- 북한의 조선중앙방송도 7월 24일 “농사를 잘 짓는 것은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라며 “농사를 잘 지어 먹는 문제를 푸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지키고 사회주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첫째 가는 중대사”라고 주장

● **北구제역 계속 발병해 방역사업 중(7/29,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에서 소, 돼지 등에 발생하는 전염병인 구제역이 사라지지 않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 당국의 협조를 받아 방역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이 기구의 크리스찬 마차이카 긴급구호사업 국장이 29일 발표, 그는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최근까지 100건가량의 발병 사례가 보고돼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설명

- 2007년 초엔 평양 인근 농장에서 소 466마리와 돼지 2천630마리가 구제역에 감염돼 살처분됐음.

● 北, 農農격차 완화 고민(2008년 2호, 경제연구)

- ‘경제연구’는 “산간지대 농민의 생활수준은 별방(평양)지대 농민에 비해 의연히 뒤떨어져 있다.” 며 북한에서 평야의 곡창과 산간지역간 농민들의 생활수준 격차와 이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은 데 따른 고민을 드러냄.
- 경제연구는 특히 “농촌 지대 사이 차이는 농업 생산력 발전 수준과 농민의 생활수준 차이가 된다”면서 “산간지대의 낙후성을 그대로 두고서는 인민경제의 2대 부문의 하나인 농업을 빨리 발전시킬 수 없으며, 농업 근로자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
- 이러한 생산력 및 생활수준 차이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 학술지는 ▲산간지대에 적합한 농기계 보급을 비롯한 농업 기술장비 지원과 공업 생산력 균형배치 ▲가축과 과일나무 등 산간의 특성에 맞는 농업생산의 지역화 및 전문화를 내놓음.
- 경제연구는 “협동경리에서 창조된 분배 몫의 크기와 부업에서 얻는 현금 수입”을 합친 농가소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업생산을 전문화, 다각화하고 부업생산을 늘려 산간지대 농민의 수입을 빨리 늘려야 한다”고 강조

● 경제연구, 예산의 횡령·유용·전용 통제 강조(2008년 2호, 경제연구)

- ‘경제연구’는 ‘경제강국’ 건설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재정통제를 한층 강화할 것을 촉구
- ‘경제연구’는 재정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사업에서 실리를 보장하며 ▲재정규율을 엄격히 확립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
- 전문지는 재정통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재정기관과 기관·기업소의 재정관리부서에 대한 감독과 관리는 물론 재정검열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관·기업소들에 재정검열위원회를 구성해 자체 검열을 강화할 것을 주문

● 장사 단속에 평양시민도 고통(7/28, 연합)

- 북한당국이 28일 현재 평양을 비롯한 전역에서 비사회주의그루빠(비사그루빠) 검열을 통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 평양시민들도 살기 힘들어져 불만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최근 평양은 북한의 여느 지역보다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는데, 그나마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히’ 주던 배급도 한 달에 5~10일 분량으로 줄어듦. 따라서 비리와 부정을 저지르거나 장사를 하지 않고는 도저히 먹고 살 방도가 없어졌음. 그러나 당국은 이런 현실을 놓고 “사회주의 수도의 면모를 손상시키고 나라 망신시킨다”며 비사그루 뼈아픈 인민보안성 정치대학 졸업생들을 풀어 거리와 골목을 누비며 대대적인 검거와 단속벌이고 있음.
 - 단속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견을 내거나 불만을 토로하면 즉각 지방으로 추방시켜 주민들로서는 억울하지만 입도 병긋할 수 없음.

라. 사회·문화 관련

● 北서 24절기 설명 CD 인기(8/2, 조선신보)

- 북한의 평양에서 입춘, 하지, 백로 등 24절기를 소개한 CD가 시민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조선의 24절기’라는 CD에선 1900~2050년의 양력과 음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24절기 기상·기후의 특징을 설명하는 동영상과 그림, 음성 등이 담겨있고, 지구의 운동, 달의 모양과 운동, 태양의 운동 등에 대한 천문지식과 ‘리언(이언·날씨 현상과 관련된 항간의 속담)’도 소개

● 평양, 찜통더위에 맥주집 인기(8/2, 조선신보)

- 습기가 많은 삼복더위가 이어지면서 맥주집들은 오후 5시만 되면 퇴근길에 오른 시민들의 발길을 잡기 위해 일제히 문을 여는데, 무더운 삼복더위가 이어지는 요즈음 많은 손님들로 북적거린다고 신문은 보도
- 현재 평양시에는 2002년 5월부터 가동한 대동강맥주공장에서 만든 맥주를 판매하는 150여 곳의 ‘대동강맥주집’과 1946년 설립된 평양맥주공장의 제품을 파는 수십개의 ‘평양맥주봉사소’가 운영
- 평양맥주공장은 지금까지 60년이 넘게 ‘전통적인 맛’을 독특하게 계승하고 있어 “평양맥주는 대동강맥주에 못지 않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손님들이 “대동강맥주는 가스 함량이 많아 시원하고 쫄하다(톡 쏜다)”거나 “평양맥주는 구수하고 상쾌하다”는 등의 평가를 내놓고 있다고 소개

● 평양식당들, 남녀평등법 기념 여성 우대(8/2, 조선신보)

- 평양 시내에 있는 식당들이 ‘남녀평등권법령 발표일’을 맞아 여성들을 우대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조선신보가 2일 보도
- 조선신보는 법령 발표 기념일인 7월 30일 남성이 여성을 앞세우고 나선 노인 부부, 중년 부부, 청년 남녀 등 수많은 쌍의 남녀가 식당을 찾았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러나 ‘우대’의 내용은 설명하지 않음.



* 북한은 1946년 7월 남녀평등권법령을 제정한 데 이어 ‘사회주의 헌법’ 제77조에서 “여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 **北, 독도의 다양한 이름 소개(8/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이 “독도는 조선의 섬들 가운데서 별명이 가장 많은 섬이기도 하다”며 예로부터 내려오는 독도의 다양한 이름을 소개하고 “독도는 우리 민족의 땅”이라고 강조

● **北, 최홍희 태권도 백과사전 발간(8/1, 조선신보)**

- 북한의 조선태권도위원회에서 국제태권도연맹(ITF) 창립자인 고 최홍희 총재가 집필한 ‘태권도백과사전’(전 15권)을 펴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 총 4천800 페이지 분량의 이 사전은 한글판과 영문판이 함께 출간됐으며 최 전 총재의 경력, 태권도 발전사와 기술, 태권도인들의 활동 등을 소개하면서 특히 5가지 태권도 동작 구성과 함께 3천200여 가지에 달하는 동작을 사진과 함께 담았음.

* 최 전 총재(1918~2002)는 함경북도 명천 출생으로, 남한에서 대한태권도협회(1959)와 국제태권도연맹(1966)을 차례로 창립하고 1972년 캐나다로 이민한 후 북한에서 태권도 붐을 일으켜 ‘북한 태권도의 대부’로 불림. 최 전 총재가 정립한 태권도 규칙과 기준을 따르는 북한은 평양 신미리 애국열사릉에 있는 그의 묘소에서 추모행사도 개최하고 있음.

● **아리랑 공연 ‘일시 중단’설(8/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대규모 집단체조인 ‘아리랑’을 올해 공연 후 중단하고 고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70회 생일을 맞는 2012년 새로운 내용으로 재개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보도(남측 관광객 확보 문제?)

* 아리랑은 김일성 주석의 90회 생일을 맞아 2002년 4월 처음 상연된 후 매년 ‘재형상(개작)’ 작업이 이뤄져왔음.

● **김정일, 음식 못하는 여성은 불합격(2008년 6월호, 조선여성)**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음식을 거론하면서 “음식은 여성의 미(美)”라며 “음식을 맛있게 만들지 못하는 여성은 사실상 여성으로서는 불합격”이라고 말했다고 북한의 여성 월간잡지 ‘조선여성’ 최근호(2008.6)가 소개

- 잡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30여년 전인 1979년 3월 한 여성간부와 음식을 주제로 대화하면서 “여성들이 얼마나 알뜰한가 하는 것은 그가 만든 음식을 먹어보면 알 수 있다”며 “여성들은 물론 품성도 아름답고 외모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음식



을 잘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

- 이어 그는 “음식을 늘 대강대강 만들어 먹이는 여성과 사는 남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불행한 사람”이라며 “늘 맛이 없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도 불행한 일이지만, 그보다도 자기에게 참다운 사랑을 바치지 않는 안해(아내)와 한 평생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소개, 그는 “정성이란 아낌없는 사랑”이라고 말했다는 것
- 김 위원장은 또 “음식은 과학”이라며 “여성들이 음식을 잘 만들려면 여러 가지 책도 보고 경험도 쌓아서 음식에 대한 지식을 깊이 알아야 한다”고 말하고 “음식 한가지라도 어떻게 하면 맛있게 만들 수 있겠는가 하고 탐구하고 노력하는 바로 여기에 여성들의 미가 있다”고 덧붙였다고 잡지는 소개

● **개성시에 홍수 피해 발생(7/31, 조선중앙TV)**

- 개성시의 여러 곳에서 최근 홍수피해가 발생했다고 조선중앙TV가 31일 보도
- 방송은 “얼마 전 갑자기 들이닥친 강한 폭우와 비바람으로 개성시 안의 여러 곳이 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개성시 판문점리와 동창리, 립한리를 비롯한 시 안의 전반적인 리(里)들에서 1천493정보(1정보는 3천평)의 논과 40정보의 밭들이 침수돼 좋은 수확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피해상황을 화면과 함께 보도, 조선중앙TV는 “17개소에서 1천138m의 도로가 심하게 파괴됐고 수 많은 살림집과 공공건물이 물에 잠기거나 무너졌다”며 “지금 시에서는 큰물 피해를 하루 빨리 가서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 * 이와 관련, 개성공단 지원단 관계자는 “개성지역에 지난 24일 하루동안 180mm의 집중호우가 내렸다는 보고는 받았다”며 “하지만 개성공단은 하수처리 등에 큰 문제가 없어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

● **北 영화 소재로 남녀간 애정관계 증가(2008년 2호, 예술교육)**

- 북한 영화에서 ‘선군시대’에 맞는 인간과 생활을 그리기보다 남녀간 애정관계 같은 것에 눈돌리거나 사무실이나 집안 세트를 호화롭게 꾸미는 등 “비본질적이고 사말(些末. 자질구레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세대적인 생활”에 치우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최근 북한 영화의 이러한 동향은 북한의 조선영화인동맹 중앙위원회 김완중 서기장이 계간지 ‘예술교육’ 최근호(2008년 2호)에 쓴 평론에서 지적, 그는 “인민의 사상교양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는” 영화보다는 선정적 내용에 영화적 기교를 중시하는 영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비판

● **北, ‘세계 말라리아의 날’ 행사 개최(7/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30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세계 말라리아의 날’ 기념행사



를 가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행사에는 보건성과 평양시 보건부문 관계자, 북한주재 국제기구 대표
들이 참석했으며 리봉훈 보건성 부상과 아르빈 마수르 세계보건기구
(WHO) 평양대표부 대리대표가 연설
- 또 행사 참석자들은 평양시 중화군 룡산리 인민병원을 방문해 말라
리아 예방을 위한 이 병원의 예방활동을 참관
 - * WHO는 매년 북한 말라리아 방역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우리 정
부는 2001년부터 이를 지원해왔고 2008년에도 WHO의 북한 말
라리아 방제사업을 위해 약품 및 진단 장비, 교육 및 기술지도 등
분야에 현금과 현물 합쳐 총 118만달러 상당을 지원

● **노동신문, 여성들에 더 큰 역할 독려(7/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북한에서 ‘남녀평등권법령’ 발표 62주년을 맞아 여
성들에게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더욱 힘차게 싸워 나가
야 할 성스러운 과업”에 더 크게 기여할 것을 촉구

● **北, 교육기관들에 철저한 수해예방 당부(7/17, 교육신문)**

- 교육신문은 “장마와 큰물(홍수) 피해가 설마 우리 단위에까지 미치
겠는가 하는 만성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각급 학교에서 수해
예방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

● **좋은벗들, 北 판교읍에 식량난 비방글등 불평 확산(7/29, 오늘의 북한
소식)**

- 유엔 식량관련 기구가 최근 북한의 함경도와 량강도의 식량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다른 지역도 ‘만성적인 식량난’ 상황인 것으로 분
류한 가운데 북한 내부에서 식량난에 대한 불평·불만이 확산되고 비
방글이 나붙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고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이
29일 주장
- 소식지는 “강원도 판교군 판교읍에 식량 사정과 관련해 사회를 비방
하는 내용의 글이 곳곳에 나붙어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며 “비
방문중 1차로 회수된 것만 60장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언
- 소식지는 “비방문이 나붙은 곳은 즉각 봉쇄”됐으며 “검찰소, 보위부,
보안소는 긴급 합동회의를 연 뒤 통행을 차단하고 외부인들을 검열
하는 등 진상 파악에 나섰다”고 설명
- 소식지는 “백날 시찰하러 다니면 뭐하나. 백성들한테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라며 노골적인 불평·불만이 퍼지고 있다”면서 “당국에서는
‘말 반동’을 주시하며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
런 소리를 잠재울 만한 묘책은 없는 상태”라고 주장

● **北식량난 한쪽에선 ‘피자’ 만들기 소개(2008년 5월호, 천리마)**

- “빼자는 이렇게 만드세요.” 잡지 ‘천리마’(2008.5월호)가 이탈리아



요리인 피자 만드는 방법을 상세하게 소개, 북한은 피자를 ‘삐짜’로 표기하고 있음.

● **북한선수단 본진, 2일 오전 베이징 도착(7/28, 연합)**

-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BOCOG) 관계자에 따르면 박학선 조선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리선호 서기장이 이끄는 북한선수단은 2일 오전 9시45분 고려항공 직항편으로 베이징 서우두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짐.
- 유도와 탁구, 역도, 레슬링, 복싱, 사격, 체조, 마라톤, 여자축구, 양궁, 다이빙 및 수중체조 등 11개 종목에 선수 63명과 경기·본부임원 71명 등 총 134명을 파견해 역대 최대 규모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 **성 김, 北·中과 북핵 검증의정서 협의(7/31, 연합)**

- 대북협상 특사로 내정된 성 김 미국 국무부 전 한국과장이 31일 오후 중국에 도착해 중국 및 북한과 북핵 검증의정서에 대한 세부협의를 들어감.
- 앞서 손 매코맥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성 김 전 과장의 방중 일정을 공개한 뒤 “그는 중국과 북한의 협상 파트너들을 만나 북핵 협상의 진전을 모색하고 의정서에 대한 세부사항을 좀 더 분명하게 하고 확정하는 작업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

● **北, 핵검증 때 샘플채취 불허(7/30,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은 핵신고 검증을 위한 영변 핵시설의 방문은 허용하겠지만 샘플 채취는 불가라는 입장을 미국측에 밝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
- 방송은 ‘미국의 정통한 외교전문가’의 말을 인용, “북한은 5MW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다른 영변시설에서 핵샘플 채취를 허용할 용의가 있다는 당초 의사를 거둬들였다”면서 북한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회담 때 이 같은 입장을 미국측에 통보했다고 전언

● **北, 美 위협 강화 땐 핵무력 계속 강화(7/29, 민주조선; 노동신문)**

- 민주조선은 29일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책동이 강화되면 우리 공화국(북한)도 부득불 위력한 자위적 억제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 신문은 ‘어째서 사태를 왜곡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우리 공화국의 핵무력은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 수단”이라고 언급



- 민주조선은 “미국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최신 군사장비들을 집중 배치하고 각종 군사연습을 벌임으로써 대화 상대방인 우리를 자극하고 대화와 협상의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간 적대관계의 청산에서 “관건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완전히 버리는 데” 있지만 “미국으로선 아직까지 그러한 정치적 결단을 내릴 준비가 돼 있지 못하다”는 인식을 나타냄.

나. 북·미 관계

● 북·미, 8월 11일전 검증체제 추가협의를 듯(8/3, 연합)

- 미국과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 시한인 8월 11일 이전에 핵 검증체제 협의를 마무리짓기 위해 조만간 핵심 당국자간 추가회동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은 특히 검증체제와 관련된 쟁점인 샘플채취와 불시방문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테러지원국 해제 선언을 시한 이후로 연기할 방침을 시사하고 있음.
- 6자회담과 비핵화실무그룹회의 의장국인 중국은 북한과 미국간 협에서 쟁점에 대한 이견조율이 안될 경우 11일 이전에 실무그룹회의를 개최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정부 소식통이 3일 밝힘.
- 이 소식통은 “미 정부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는 절차상 시한(8월 11일)을 지키기 위해 북한과의 협의에 주력하고 있으나 쟁점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면서 “베이징에서 진행된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협상특사와 리 근 북한 외무성 미 국국장간 협의이후 양측이 추가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 그레이엄, 김영대부위원장 면담(7,31; 8/2, 조선중앙통신)

- 미국 종교지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31일 북한을 방문, 방북중인 미국의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2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면담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보내는 선물을 전달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 그레이엄 목사는 2000년 5월과 2002년 6월에 각각 방북한 적이 있으며 2005년과 2006년 8월에는 방북한 특별보좌관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선물을 보내기도 했음. 특히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마음대로 백악관을 드나들 정도로 부시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북미관계가 진전되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방북을 통해 북미 양측 지도자 사이의 간접대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됨.



● **美의원, 北에 관광객피살 공동조사 촉구(8/1, 연합)**

-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북한측의 비협조로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미 하원의원이 최근 미 의회에서 북한측에 박씨 피살사건 남북한 공동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31일 확인됨.
- 미 하원에 따르면 태디우스 매코터 의원(공화, 미시간주)은 30일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7월 11일 발생한 북한 초병에 의한 금강산 관광객 박씨 총격 피살사건을 언급, “박씨 사망사건은 국제적 정밀조사 가치가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번 박씨 피살사건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겠다는 미 행정부의 결정 및 의회 통보가 나는 물론 다른 의원들에게도 선부르고(premature),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illconsidered)는 견해를 갖게 한다”고 주장

● **힐,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 참석(8/1, 연합)**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1일 상원 러셀빌딩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핵 확산 문제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가 북미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고 언급
- 힐 차관보는 북핵문제와 관련, 6자회담을 통해 2단계를 마무리하는 국면에 이르는 진전을 거뒀지만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에 도달하려면 북한의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포기 그리고 핵시설 해체, 핵물질 이전, 북한 비핵화 검증 등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다”면서 “북한이 이런 문제들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할 때까지 구체적이고도 솔직한 대화를 북한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 그는 또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의 대가로) 북한과 보다 더 정상적인 관계로 전환할 용의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인권문제는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
- 힐 차관보는 “적절한 시점에 북한지역에서 미군 유해 발굴작업을 재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
- 특히,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다가 북한에 의해 강제 납북돼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재미교포 김동식 목사의 문제를 북한에 공식 제기할 것이라고 밝힘.

● **부시, 北에 핵포기 결단 촉구(7/31, KBS)**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8월 5~6일 한국방문을 앞두고 KBS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를 바라며 그렇게 한다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
-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근본적인 문제지만 그것이 의문”이라면서 “북한의 지도자가 핵을 포기하는 결정을 한다면 미국 및 다른 6자회담 관련국들과 지금과는



다른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적극적인 관계개선 의지를 내비침. 부시대통령은 “그러나 그것은 북한의 지도자가 내려야 할 선택이고 우리는 이미 선택했다”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을 촉구

-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와 관련,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검증체계를 갖는 게 중요하다”면서 북핵 검증 대상에는 플루토늄 핵프로그램 뿐만아니라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핵이전활동에 대한 검증이 모두 포함된다고 분명히 밝힘.
- 부시 대통령은 또 “우리(미국)로선 우리가 북한에 대해 요구한 것에 대해 충분히 답변을 듣고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하다”면서 “북한의 핵신고 내역에 대한 검증이 북한이 6자회담 합의를 존중하는 지 여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그는 또 “일각에선 내가 단지 일을 진전시키는 것을 바란다고 말하지만 나는 결과를 갖기를 원한다”고 밝힘.
- 부시 대통령은 ‘평양에 북미연락사무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계획이 없다”면서 “우리의 초점은 6자회담 안에서의 관계”라고 답변

● 노동신문, 北·美평화협정 체결 거둬 주장(7/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정전협정 체결 55주년에 즈음해 “지금이야말로 미국이 유명무실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거둬 촉구
- 신문은 ‘평화협정 체결은 시대의 절실한 요구’라는 제목의 개인필명 논평에서 “조선반도(한반도)에서 핵문제를 비롯한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평화를 보장하는 데 근본 장애는 미국의 대조선(북한) 적대시 정책”이라며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종식시키고 조미 사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밖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

다. 북·중 관계

● 北주재 中대사관, 중국군 창설 기념연회(8/2, 조선중앙방송)

-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의 쑨옌핑(孫延風) 무관이 중국군 창설 81돌에 즈음해 1일, 대사관에서 북한 군 관계자들을 초청, 기념 연회를 열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2일 보도
- 연회에는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을 비롯한 북한군 간부들과 북한 주재 외국 사절과 대사관 무관들이 초대됐으며, 류샤오밍(劉曉明) 북한 주재 중국대사도 참석

● 김영남, 中올림픽 성공 기원(8/1,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1일 방북 중인 중국 공산당 대표



단과 만나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을 기원, 김 상임위원장은 이날 만수 대의사당에서 리징텐(李景田) 중국 공산당 중앙당사연구실 주임 겸 중앙당고 상무부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만나 “베이징 올림픽 픽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中스포츠업체, 北 대표팀 공식후원(7/31, 자유아시아방송)**
 - 중국의 스포츠용품 전문업체가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대표팀을 공식후원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
 - 방송에 따르면 중국 푸젠(福建)성 취안저우(泉州)시에 본사를 둔 ‘차이나 홍싱(鴻星) 스포츠 리미티드’라는 업체가 2007년 북한 올림픽픽대표팀 및 여자축구 대표팀과 후원계약을 맺고 7월까지 운동복, 양말, 운동화 등 필요품 지원을 마무리했음.
 - 이 업체는 ‘정복하라’는 뜻의 ‘Erke(鴻星爾克)’라는 브랜드로 각종 스포츠 용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북한 선수들도 같은 로고가 새겨진 운동복을 입고 올림픽에 출전
 - 업체의 제니 여 부사장은 북한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겠다는 희망과 의지가 높는데 “북한이 금메달을 따다면 제품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 먼저 (후원을) 강력히 제안했다”고 언급, 이 업체는 북한팀 후원 계약이 베이징올림픽까지이며, 향후 후원 계획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RFA는 보도
- **中 공산당 대표단 방북(6/28, 연합)**
 - 중국 공산당 대표단 6명이 28일 오후 북한 노동당 중앙국제부의 초청을 받아 북한 방문, 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리징텐(李景田) 중국 공산당 중앙당사연구실 주임 겸 중앙당고 상무부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베이징을 출발했다고 보도

라. 북·일 관계

- **北, 日문화재약탈 사죄·반환 요구(8/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일제때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문화재 약탈을 “인류 문명에 칼질한 엄중한 국제범죄”로 규정하고 사과와 반환 등을 통한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
 - 신문은 “일본은 세기가 바뀐 오늘까지도 그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사죄도 없이 약탈한 문화재를 계속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반환에 대해 어떤 담보나 약속도 없이 수염을 내리슬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조선문화재 파괴, 약탈 죄악을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한다”고 촉구
- **北, 발견·선점면에서도 독도는 한민족 것(8/2,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일 역사와 지리적 측면은 물론 무인(無人)지역과



주인이 없는 섬의 소유권에 대한 국제법적인 측면을 고려해도 독도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영토라며 그 논거를 소개

- **北단체, 日 침략범죄 반드시 결산(8/1, 일제 조선강점피해조사위원회)**
 - 북한의 '일제 조선강점피해조사위원회'는 1일 일제의 징병제 시행 65주년을 맞아 담화를 발표하고 "일제의 침략범죄를 절대로 잊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결산할 것"이라고 강조
 - 이 단체 대변인은 담화에서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영유권 주장 등을 거론하면서 일본의 이 같은 행동의 원인으로 남쪽의 이명박 정부 책임론을 지적하면서 "과거에 구애되지 말아야 한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열어나 가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대일관계 언급을 지적

- **北, 日 재침 목적 의도적 영토분쟁 주장(7/3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난하면서 일본이 주변국과 영토 분쟁을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목적은 "그를 구실로 재침을 감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 **北, 日 독도강탈 용납 불가(7/29, 역사학학회 대변인 담화)**
 - 북한의 '역사학학회'는 29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해외침략 야망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이 티끌만치라도 침해당하는 경우 단호하고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

마. 기타외교 관계

- **박의춘 북한 외무상 귀국(8/2, 조선중앙방송)**
 - 박의춘 북한 외무상 귀국이 싱가포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와 이란 비동맹운동(NAM) 회의에 참석한 뒤 2일 귀환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글린 포드 EU의원 방북(8/1, 조선중앙통신)**
 - 유럽의회 내 대표적 '북한통'으로 알려진 영국 노동당 소속 글린 포드 의원 일행이 1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 포드 의원은 최근 10년간 10여 차례 북한을 방문하고 2005년 7월에는 유럽의회 차원의 북핵 해결 지원을 목적으로 남·북한을 연쇄 방문하기도 했으며 올해 3월에도 방북했음.

- **北, 비동맹회의 채택문건 그대로 보도(8/1,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일 제15차 비동맹운동(NAM) 장관급회의 채택문건 중 남북관계 부분을 가감 없이 그대로 소개
 - 조선중앙방송은 "상(장관)들은 2000년 6월15일 북남공동선언과



2007년 10월4일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그리고 이미 채택된 기타 모든 북남 사이의 공동성명과 합의들에서 천명된대로 조선 인민 자신의 진정한 염원과 단합된 힘으로 조선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지지를 표시했다”고 보도

● 유엔, 北에 200만달러 긴급기금 지원(7/31,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웹사이트)

- 유엔이 200만달러의 중앙긴급대응기금(CERF)을 북한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와 단체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존 홀름스 유엔 인도지원 담당 사무차장이 밝힘.
- * 유엔은 지난 2월 발표한 올해 첫 CERF 할당 계획에서 콩고민주공화국, 에티오피아, 코트디부아르 등 14개 지원 대상 국가를 지정했지만, 북한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음. 올해 두번째 CERF 지원 대상에 오른 국가는 북한 외에 차드(680만달러), 이라크(500만달러), 아프가니스탄(460만달러), 시리아와 스리랑카(각 400만달러), 브루나이(360만달러) 등임.
- 릴리프웹은 이와 함께 뉴질랜드 정부가 북한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50만뉴질랜드달러(약 3억7천만원)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보도

● 北교향악단, 영국 공연 9월 이후로 연기(7/31, 연합뉴스)

-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의 영국 공연이 재정 후원이 유보된 데 따라 당초 예정됐던 9월에서 그 이후로 미뤄짐. 공연을 추진해온 영국인 성악가 수잔나 클라크는 교도통신과 전화 인터뷰에서 일정을 재조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조선국립교향악단이 서울과 뉴욕도 방문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언급
- 그는 조선국립교향악단의 연주가 150~160명과 지원 인력들이 움직이는 데 최소한 79만2천 달러가 소요되는데, 일정이 연기된 것은 공연을 지원하기로 했던 은행이 후원을 유보한 데 따른 것임. 이 은행이 유보 결정을 내린 이유는 서브프라임 위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클라크는 한국과 미국 정부에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방문이 가능한지를 문의했으나,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언급

● 北매체, 베트남 서기장, 10·4선언 지지(7/29 조선중앙통신)

- 박의춘 외무상이 최근 베트남을 방문, 농 득 마잉 베트남공산당 서기장을 면담했을 때 마잉 서기장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정신에 따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을 베트남은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



3. 대남정세

● 李대통령-北김영남, 8일 베이징서 회동(8/3, 연합)

- 이명박 대통령이 8월 8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짐.
-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8~9일 1박 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방문 첫날인 8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주최하는 오찬에서 김 위원장과 접촉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3일 전연
- 이 관계자는 “후 주석의 초청 오찬에 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나란히 초청을 받았으며, 같은 테이블에 좌석이 배치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남북한 현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北금강산지구 군부대대변인 특별담화 요약(8/3, 연합)

- 북한은 3일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의 특별담화 형식으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경위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남한 정부의 대응기조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표시하면서 “불필요한 남측 인원” 추방 등 반발 조치를 발표
- 담화는 피살된 관광객의 군사통제구역 침범 목적 등 “우리로서는 알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음에도 따지지 않고 동포라는 점을 고려하여” 유감의 뜻도 표명했는데 남한 정부가 “북남관계를 더 험악한 지경으로 몰아가려는 고의적인 반공화국 대결 책동”을 벌이고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며 이번 자신들의 조치에 대한 남측의 대응 여하에 따라 더욱 대립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

● 민노당 지도부, 8월말 평양 방문(8/1, 연합)

-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등 지도부와 당원들이 오는 21일이나 22일부터 닷새간 북한 조선사회민주당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
-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은 1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민노당과 조선사회민주당 관계자들이 전날 개성에서 실무협의를 통해 민노당 평양방문 일정에 합의했다”고 발표
- 방북단은 지도부와 당원 등 60여명 규모로 구성되며 전세기를 이용, 김포~평양간 직항로를 통해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며 민노당과 조선사회민주당은 양당 대표회담을 비롯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정당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
- * 민노당이 조선사회민주당 초청으로 방북하는 것은 지난 2005년과 2006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임.



- **남북 불교도, 평양서 해외 문화재 반환 협의(7/31, 연합)**
 - 불교 관련 단체들이 8월 초 북한 평양을 방문, 북측 관계자들과 ‘해외 불법반출 문화재 환수’ 방안을 협의
 -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공동의장 김원웅 전 국회의원)와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김의정), 문화재제자리찾기(사무총장 혜문 스님) 등은 8월 5일부터 4박 5일간 평양을 방문해 일본 궁내청에 보관된 ‘조선왕실의궤’ 등 문화재의 반환을 위해 북측과 협의한다고 30일 발표

- **통일부, WFP 공식 대북지원 요청시 입장 결정(7/30, 연합)**
 - 통일부는 30일 대북 식량지원 문제와 관련, “세계식량계획(WFP)이 식량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올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부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힘.

- **코레일, 실향민 위한 개성관광열차 운행(7/30, 연합)**
 - 코레일 전북지사는 추석을 앞두고 실향민 등을 위한 개성관광열차를 오는 9월 7일 한 차례 운행한다고 발표

- **정부, 개성공단 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7/30, 연합)**
 -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30일 “오늘 개성공단 건설현장, 시공 실패조사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면서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공사 점검단 편성 방안은 물론 개성공단 내 도로·건물 등 토목공사 안전점검 일정, 안전사고 예방 방안 등이 논의됐다”고 발표
 - 정부의 안전점검 방침은 개성공단 내에서 안전사고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김 대변인은 발표, 안전점검은 이르면 8월 말께 실시될 예정이나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음.

- **對남북협력사업자 감독·행정조치권 강화 (7/30, 연합)**
 - 정부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자와 정부 보조금 또는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검사·조사 권한을 명문화하고 필요할 경우 업무정지도 가능하도록 함.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 개정안을 31일 예고할 예정



〈첨부1〉 조선인민군 금강산지구 군부대대변인 특별담화(08.03) 요약

◇ 담화 발표 배경

우리는 지금도 사살된 관광객이 남들이 깊이 잠든 이른 새벽에 무슨 목적으로 넘어서는 안될 경계 울타리를 넘어 들어왔는지, 또 군사통제 구역안에 깊숙이 들어와 무엇을 하려고 하였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사고 경위가 어떠한지 비록 당사자가 자기의 불찰로 불상을 당하였지만 그가 같은 동포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미 유관부문을 통해 유감의 뜻도 표명하였다.

하지만 (남한측은)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그것을 구실로 앞뒤를 가리지 않고 매일과 같이 무분별한 반공화국(반북) 대결 소동에 열을 올리면서 내외의 여론을 오도하여 왔다.

여기에는 이명박 자신과 통일부 관계자들을 비롯한...당국자들이 앞장 서고 있으며 한나라당을 포함한 보수정당, 단체들이 합세하고 있다.

우리는 (남한측이) 적반하장격으로 우리를 걸고들며 계속 분주탕(소란)을 피우고 있는 조건에서 할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소동은 불순한 기도밑에 제 나름의 추측과 판단으로 사건을 날조하여 의도적으로 벌리는 반공화국 대결 책동이다.

◇ 사건 경위 설명 되풀이

우리 군인이 군사통제구역안에 들어온 정체불명의 침입 대상을 발견한 것은 지난 7월 11일 새벽 4시 50분경 경계 울타리로부터 북쪽으로 약 800m 떨어진 지점이었다.

당시 전투근무중에 있던 우리 군인은 날이 채 밝지 않은 이른 새벽의 시계상 제한으로 침입 대상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조차 식별할 수 없는 조건에서 그의 신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여러차례에 걸쳐 서라고 규정대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침입자는 거듭되는 요구를 무시하고 황망히 달아나기 시작하였으며, 공탄까지 쏘며 어떻게 하나 멈춰세우려는 우리 군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도주하다가...죽음을 초래하였다.

금강산 군사통제구역은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며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 군대의 엄격한 군사적 대응조치가 정황에 따라 즉시적으로



취해지는 최전방지역이다.

(남한 국군의 경우에도) 상대가 자기의 관할통제 구역안에 들어서면 먼저 경고신호를 하고 불응하면 경고사격을 하게 돼 있으며 그래도 불복하면 조준사격을 한다는 이른바 ‘교전규칙’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있다. 관광객이 우리측 군사통제구역안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멈춰서라는 우리 군인의 요구에 응하였더라면 죽음을 당하는 일은 애당초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터놓고 말하여 군사통제구역 안에 불법침입한 그가 죽음을 당하였으니 말이지 우리로서는 알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다.

◇ 현장조사 요구 거부

현지조사에 대해 말한다면 죽은 당사지를 금강산관광지에 상주하고 있던 남측 인원들이 현지에서 직접 확인하고 넘겨받아간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금강산관광법과 관광지구의 출입,체류에 관한 합의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관광지안에서 관광객들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제하여 놓은 것이다.

(남한 정부는) 이러한 규제사항들이 마치도 관광지 밖에 있는 우리 군사통제구역 안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듯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면서 이번 사고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 씌워보려고 획책하고 있다.

현실은 (이명박 대통령이) 동결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파국적인 사태에 몰아가고 있으며 이제는 역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데로부터 그 이행을 완전히 파기하는 행동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대화의 재개’에 대한 떠벌임이 여론환기를 위한 빈 넋두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 북한군의 조치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강산관광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고 무분별한 반공화국 대결 소동에 계속 매달리고 있는 (남한 정부의) 엄중한 도발행위에 대처하여 조선인민군 금강산지구 군부대 대변인은 위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밝힌다.



1. 우리는 금강산관광지구에 체류하고 있는 불필요한 남측 인원들을 모두 추방할 것이다.

2. 금강산지구에 들어오는 남측 인원과 차량들에 대한 군사분계선통과를 보다 엄격히 제한, 통제할 것이다.

3. 앞으로 금강산지구의 관광지와 군사통제구역안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하여 강한 군사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오늘의 북남관계가 파국적인 사태로 번져가는 경우 시대와 민족 앞에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성 김 “北 검증초안 반응 없어”(8/1)

- 북핵 6자회담의 특사로 지명된 성 김 미국 국무부 전 한국과장은 1일 북한이 아직까지 북핵 검증 초안에 대한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과장은 이날 오전 숙소인 중국 베이징 차이나월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31일 북한 측과 첫날 예비접촉을 한 결과 북한은 미국이 제시한 북핵 검증 초안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밝히지 않았다”면서 “리 근 북한 외무성 미국국장과 오늘 다시 만나 추가협의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 주중 미국대사관 관계자도 두 사람이 전날 오후 1시간 가량 회동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협상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미국은 지난달 12일 끝난 베이징 6자 수석대표회담에서 자국의 입장을 담은 4쪽분량의 검증 초안을 제출했으나 북한은 최근 싱가포르에서 열린 비공식 6자외교장관 회담에서는 물론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음. 성 김 지명자는 지난 31일 6자회담 특사 자격으로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북한 및 중국 측과 만나 북핵 신고의 구체적인 검증방안을 협의한 뒤 2일 출국.



● “북핵 검증의정서 마련에 수개월 걸려” <RFA>(8/1)

- 미국이 북한의 핵신고 직후 북한에 제시한 것은 당초 알려진 검증의 정서 초안이 아니라 검증의 원칙을 담은 문건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일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음. 리스 전 실장은 “이같은 사실을 알 만한 위치에 있는 국무부 관리로부터 직접 들었다”면서 “미국이 준 것은 검증 원칙에 관한 4쪽짜리 문건”이며 이는 검증실행 지침이 담긴 의정서 초안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미국은 북한에 검증 원칙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6자회담 내 다른 참가국들과 협의해야 했지만 성과주의에 흐른 나머지 그러지를 못했다”며 “베이징 6자회담 직전에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가 이 안을 참가국 수석대표들에게 회람시키고 현재 이들 나라의 답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음.
- 이어 그는 “앞으로 검증 의정서를 마련하려면 몇년은 아니더라도 최소 몇 달은 걸리기 때문에 부시 행정부가 제시한 8월 11일까지 검증 의정서 마련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그럼에도 미국이 8월 11일 이란 시한을 북측에 제시한 것은 “불가능한 줄은 알지만 북측에 대해 가급적 빨리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한 압력용일 수 있다”고 분석했음.

● 힐 “北인권문제, 정상화 핵심요소”(7/31)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1일 “미국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과 핵확산 문제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특히 북한의 인권문제가 북미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음.
- 힐 차관보는 이날 상원 러셀빌딩에서 열린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핵문제와 관련, 6자회담을 통해 2단계를 마무리하는 국면에 이르는 진전을 거뒀지만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에 도달하려면 북한의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포기 그리고 핵시설 해체, 핵물질 이전, 북한 비핵화 검증 등 중요한 과정이 남아 있다”면서 “북한이 이런 문제들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할 때까지 구체적이고도 솔직한 대화를 북한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또 청문회에서 제기된 북한의 인권문제와 관련,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의 대가로) 북한과 보다 더 정상적인 관계로 전환할 용의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인권문제는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힐 차관보는 “한국 국회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주목한다”며 “대북 인권특사인 제이 레프코 위츠가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전했다.



● 힐 “北에 우라늄농축·핵이전 문제 압박”(7/31)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31일 오전 상원 군사위원회의 6자회담 관련 청문회에 출석, 지금까지 북한과의 협상에서 성공을 거두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한 작업에는 아직도 많은 일이 남아있다고 거듭 상기시키고, 미국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도 다뤄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 이날 상원 군사위의 청문회는 미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기 시작하는 8월 11일을 앞두고 북핵프로그램 검증관련 진척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열렸음.

● 부시, 北에 핵포기 결단 거듭 촉구(7/31)

- 부시 대통령은 내달 5,6일 한국방문을 앞두고 KBS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를 바라며 그렇게 한다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도 좋은 일일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고 KBS가 전했다.
-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근본적인 문제지만 그것이 의문”이라면서 “북한의 지도자가 핵을 포기하는 결정을 한다면 미국 및 다른 6자회담 관련국들과 지금과는 다른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적극적인 관계개선 의지를 내비쳤음. 그는 “그러나 그것은 북한의 지도자가 내려야 할 선택이고 우리는 이미 선택했다”며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음.
- 부시 대통령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와 관련,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검증체계를 갖는 게 중요하다”면서 북핵 검증 대상에는 플루토늄 핵프로그램 뿐만아니라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핵이전활동에 대한 검증이 모두 포함된다고 분명히 밝혔음.

● 성 김, 北·中과 북핵 검증의정서 협의(7/31)

- 대북협상 특사로 내정된 성 김 미국 국무부 전 한국과장이 31일 오후 중국에 도착해 중국 및 북한과 북핵 검증의정서에 대한 세부협의를 들어갔음.
- 베이징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30일 미국을 출발해 이날 오후 베이징에 도착한 김 전 과장은 이번 방문 기간 중국 및 북한의 협상 파트너들과 만나 북한의 핵 검증 의정서에 대한 세부 협의를 벌였음.
-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베이징에 도착하는 성 김 과장이 중국 외교부의 한반도 관련 책임자와 만나 6자회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밝혔음.

● 성 김, 북핵 검증의정서 논의차 訪中(7/30)

- 대북협상 특사로 내정된 성 김 미 국무부 전 한국과장이 중국과 북한



의 협상 파트너들과 만나 북한의 핵 검증의정서에 대한 세부협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고 미 국무부가 30일 밝혔다.

- 손 매코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김 특사 내정자)는 핵검증의정서에 대해 논의하러 간다”며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과 싱가포르 6자 장관급 회담 등에서 검증에 대한 원칙과 검증 프로그램 진전을 위한 노력 재확인 등 핵검증의정서에 관해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성 김은 오늘(30일) 워싱턴을 출발해 토요일(8월2일) 돌아올 예정”이라고 전했다.

● 성 김 美6자회담특사, 본격 활동 착수(7/30)

- 북한과의 핵문제 협상을 전담할 6자회담특사로 내정돼 임명 절차가 진행 중인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이 최근 사실상 대북협상특사로써 본격 활동에 착수한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성 김 특사가 지난 22일부터 업무를 넘겨 받고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안다”면서 “정식 임명되는데 나름대로 절차가 있고 이 절차가 마무리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 “北, 핵검증 때 샘플채취 불허” <RFA>(7/30)

- 북한은 핵신고 검증을 위한 영변 핵시설의 방문은 허용하겠지만 샘플 채취는 불가라는 입장을 미국측에 밝혔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
- 방송은 ‘미국의 정통한 외교전문가’의 말을 인용, “북한은 5MW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다른 영변시설에서 핵샘플 채취를 허용할 용의가 있다는 당초 의사를 거둬들였다”면서 북한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회담 때 이 같은 입장을 미국측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부시 행정부 내에선 내달 11일까지 검증계획서가 마련되지 않아도 과연 북한을 예정대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해야 할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 전문가는 말했다.

● 김숙 “北, 핵폐기전 ‘추가 단계’ 주장”(7/29)

-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9일 북한이 비핵화 마지막 과정인 3단계 ‘핵폐기’에 앞서 1~2개의 단계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 김 본부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6자회담 결과와 향후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언론재단 포럼에서 발제를 통해 지난 6자 수석대표 회담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은 3단계가 마지막 단계이고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북한은 영변 냉각탑 폭파와 별도로 영변 핵시설 폐기 조치를 하나의 단계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상응 조치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비핵화 3단계가 아니라 7단계, 8단계 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폐기(dismantlement)’와 ‘포기(abandonment)’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면서 “폐기라는 용어는 시설이나 장치를 허물어버리는 것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는 완전한 핵 포기와 국외반출까지 생각하고 ‘포기’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그는 비핵화 3단계에 언급, “3단계는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라며 “가장 어려운 협상 과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음.

나. 미·북 관계

● 北외무상, 美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 만나(8/3)

- 북한 박의춘 외무상이 3일 방북중인 미국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를 만났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 통신은 “박의춘 외무상이 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미국 목사 프랭클린 그레이엄과 일행을 만나 담화를 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대화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 미국 종교지도자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는 마음대로 백악관을 드나들 정도로 부시 대통령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북미관계가 진전되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방북과정에서 북미 양측 지도자 사이의 간접대화가 이뤄질 지 주목됨.

● 힐 “김동석목사 문제 北에 제기하겠다”(8/1)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1일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다가 북한에 의해 강제 납북돼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재미교포 김동석 목사의 문제를 북한에 공식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김 목사의 납치문제와 관련,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 자신이 했던 것처럼 기꺼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 힐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서 김 목사의 납치문제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북한에 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냐는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그의 부인으로부터 편지를 받았고 답장을 한 적이 있으며 그들과 직접 만나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 한편 김목사는 2000년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다가 북한에 강제 납북돼 이듬해 1월 고문 후유증과 영양실조로 북한 감옥에서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으로는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음. 김 목사의 가족들은 현재 미국 일리노이 주(州)에 거주하고 있음.

● 美 의원, 北에 관광객피살 공동조사 촉구(8/1)

-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이 북한측의 비협조로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가운데 미 하원의원이 최근 미 의회



에서 북한측에 박씨 피살사건 남북한 공동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31일 확인됐음.

- 미 하원에 따르면 태디우스 매코터 의원(공화.미시간주)은 30일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11일 발생한 북한 초병에 의한 금강산 관광객 박씨 총격 피살사건을 언급, “박씨 사망사건은 국제적 정밀조사 가치가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음.
- 매코터 의원은 “북한 당국은 이번 끔찍한 사건에 대해 한국측과 공동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국 정부가 즉각 금강산 관광을 중단했는데, 공동조사가 이뤄지고 북한이 재발방지를 약속할 때까지 금강산 관광은 재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北, 1990년대 후반 이후 최악의 식량위기(7/30)

- 북한이 지난해 8월 발생한 홍수와 흉년으로 인해 1990년대 후반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식량위기를 맞고 있다고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30일 밝혔음. 장 피에르 드 마저리 WFP 평양사무소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3주간 식량농업기구(FAO)와 공동으로 북한 전역에서 긴급 식량안보평가를 실시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음.
- 드 마저리 소장은 “북한 주민 500~600만명이 식량난으로 인해 끼니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거나 야생 과일이나 초근목피로 목숨을 연명하는 등 기아 수준으로 전락할 위험에 빠지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또 “북한 도시 주민들이 받는 국가 식량배급량이 1인당 하루 평균 450~500g에서 150g으로 감소했으며 도시 주민들은 어린이들을 식량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시골로 보내고 있다”고 말했음.

● 美의회 대북 테러지원국 반대입법안 불발<VOA>(7/30)

- 미 행정부의 대북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에 반대하기 위해 일부 미 하원 의원들이 제출한 입법안이 사실상 불발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0일 전했다. 방송은 미 하원 외교위가 내달 4일 시작되는 휴회 전에 이 법안을 심의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해제 조치가 발효되는 내달 11일까지 의회의 반대 입법이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 “미국행 탈북자 체코 경유..첫 사례”(7/30)

- 중국 베이징의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에서 보호받던 탈북자 5명이 미국행을 위해 체코 프라하에 체류중이며 빠르면 이번주 중 미국에 입국할 것이라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
- 방송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으로 이뤄진 이들 탈북자는 지난주까지 UNHCR의 보호를 받던 중 북송될 위험에 처했지만, UNHCR의 긴급지원 요청을 받은 체코 정부가 ‘일시 체류’를 허용함에 따라 중국에



서 비행기편으로 지난 27일 프라하에 도착했다”고 체코 내무부를 인용해 전했다.

● **美의원 “북핵합의, 백악관-의회 공조결여 사례”(7/30)**

- 미 하원 정보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피트 호에크스트라 의원은 29일 북한 핵과 관련된 외교적 합의는 백악관과 의회의 공조가 결여된 사례라고 지적.
- 호에크스트라 의원은 이날 정치전문 일간지 ‘폴리티코’에 기고한 글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의회와 동맹국들과 좀더 협력을 했더라면 이라크와 기타 지역에서 저질러진 외교적 실수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 그는 “공화, 민주당을 불문하고 많은 의원들은 백악관이 의회에 구체적인 핵심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북핵) 합의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북핵 협상이 발표되는 날까지 행정부는 북한의 우리놈 농축프로그램에 대한 대의회 브리핑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다. 중·북 관계

● **<올림픽> 북한선수단 입촌..‘굳게 다문 입’(8/2)**

- 2008 베이징올림픽 출전국 가운데 베이징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인 북한 선수단 본진이 2일 선수촌에 들어왔다. 북한 선수단은 이날 오전 고려항공 직항편을 타고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버스에 올라 현지 시간으로 11시 40분께 선수촌 입구 ‘웰컴존’에 도착했다.
- 김장산 단장을 비롯해 이날 선수촌에 입촌한 북한 선수단은 총 25명. 체조와 역도, 양궁 선수들이 10명 정도 됐고 나머지는 각 종목 지도자와 조선올림픽위원회 임원이었음. 김장산 단장과 임원 한 명이 조 직위원회에서 제공한 승용차를 타고 먼저 도착했음.

● **<올림픽> 北 응원단 6일 선양서 첫 선(8/1)**

- 북한 올림픽 응원단이 오는 6일 선양(瀋陽)에서 첫 선을 보일 전망이다. 중국 베이징(北京)의 복수 대북소식통은 1일 “총 170여 명으로 구성된 북한 올림픽 응원단이 4일 오후 선양에 도착해 칠보산호텔에 여장을 풀 예정”이라고 전했다.
- 북한 응원단은 오는 6일 선양 올림픽체육센터 경기장에서 열리는 올림픽 여자축구 북한 대 나이지리아 경기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돌입하게 됨.

● **<올림픽> 中스포츠업체, 北 대표팀 공식후원(7/31)**

- 중국의 스포츠용품 전문업체가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대표



팀을 공식후원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전했다.

- 방송에 따르면 중국 푸젠(福建)성 취안저우(泉州)시에 본사를 둔 ‘차이나 홍싱(鴻星) 스포츠 리미티드’라는 업체가 지난해 북한 올림픽 픽대표팀 및 여자축구 대표팀과 후원계약을 맺고 이달까지 운동복, 양말, 운동화 등 필요품 지원을 마무리했음.
- 이 업체는 ‘정복하라’는 뜻의 ‘Erke(鴻星爾克)’라는 브랜드로 각종 스포츠 용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북한 선수들도 같은 로고가 새겨진 운동복을 입고 올림픽에 출전함.

● 中 공산당 대표단 북한 방문길 올라(7/28)

- 중국 공산당 대표단 6명이 28일 오후 북한 노동당 중앙국제부의 초청을 받아 북한 방문길에 올랐음. 중국 신화통신은 이날 리징텐(李景田) 중국 공산당 중앙당사연구실 주임 겸 중앙당교 상무부교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베이징을 출발했다고 보도.

● <올림픽> 北-中 교량폐쇄, 北태도가 ‘변수’(7/28)

- 중국 외교부가 최근 올림픽 기간 북중 접경지역 교량 폐쇄설을 부인하고 나섰지만 최근 북중 접경지역의 경계수준이 부적 높아진 것과 관련, 상황에 따라 일부 교량은 폐쇄될 가능성은 없지 않다는 관측도 부상하고 있음.
- 북중 교역의 최대 창구인 중국 단둥(丹東)의 대북무역업자들은 28일 “교량 폐쇄설은 이미 7월 초부터 단둥지역에서 떠돌던 소문이라며 현재까지도 중국측이 교량을 폐쇄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 적도 없고 정상적으로 통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 단둥-신의주, 투먼(圖們)-남양 등 북중 간 주요 국경출입구를 제외하고 탈북자 또는 마약의 이동통로로 이용될 수 있는 일부 교량은 폐쇄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라. 일·북 관계

● 北 “발견선점면에서도 독도는 한민족 것”(8/2)

- 북한의 온라인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일 역사와 지리적 측면은 물론 무인(無人)지역과 주인이 없는 섬의 소유권에 대한 국제법적인 측면을 고려해도 독도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영토라며 그 논거를 소개했음.
- 우리민족끼리는 ‘독도는 조선민족의 고유영토이다’라는 기획물의 세 번째 기사에서 김유철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후보원사 교수와 인터뷰 형식으로 ‘발견의 원리’와 ‘선점의 원칙’을 내세웠음.
- 김 교수는 “무인도가 어느 나라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를 결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그 섬을 제일 먼저 발견해야 한다는 ‘발견



의 원리'와 제일 먼저 차지해야 한다는 '선점의 원칙'이라고 지적하고 독도는 이런 원리와 원칙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우리 나라의 고유한 섬"이라고 말했다.

- 그는 또 근대적인 국제법이 나오기 전에도 "영토의 소유권 문제를 규정하는 데서 국가적인 정사(正史)와 지리책, 사전들은 해당 국가의 기본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삼국사기', '고려사', '이조실록', '신증동국여지승람', '증보문헌비고' 등의 독도 기술을 들었다.

● 北신문 "日 재침 목적 의도적 영토분쟁"(7/31)

-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난하면서 일본이 주변국과 영토 분쟁을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목적은 "그를 구실로 재침을 감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 신문은 "재침을 노린 위험한 영토강탈 책동" 제하 논평에서 일본이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할 수 있게 된 상황에서 "이제 남은 것은 해외침략, 재침의 구실을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바로 영토 분쟁을 통해 그 구실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 北역사학회 "日 독도강탈 용납 않을것"(7/29)

- 북한의 '역사학회'는 29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해외침략 야망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이 티끌만치라도 침해당하는 경우 단호하고 무자비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학회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나라의 신성불가침의 영토인 독도를 빼앗아 내려는 일본의 책동이 실천 단계에 들어섰다"면서 "역사학회는 일본 반동들의 독도강탈 책동을 우리 나라에 대한 재침 책동으로 간주하고 이를 전체 역사학자들의 이름으로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고 말했다.

마. 기타

● "北교향악단 영국 공연 9월 이후로 연기"(7/31)

-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의 영국 공연이 재정 후원이 유보된 데 따라 당초 예정됐던 9월에서 그 이후로 미뤄졌다. 공연을 추진해온 영국인 성악가 수잔나 클라크는 교도통신과 전화 인터뷰에서 일정을 재조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조선국립교향악단이 서울과 뉴욕도 방문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조선국립교향악단의 연주가 150~160명과 지원 인력들이 움직이는 데 최소한 79만2천 달러가 든다고 말했다. 일정이 연기된 것은 공연을 지원하기로 했던 은행이 후원을 유보한 데 따른 것임. 이 은행이 유보 결정을 내린 이유는 서브프라임 위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유엔, 北에 200만달러 긴급기금 지원(7/31)

- 유엔이 200만달러의 중앙긴급대응기금(CERF)을 북한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와 단체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존 홀름스 유엔 인도지원 담당 사무차장이 밝혔다.
- 31일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웹사이트 '릴리프웹'에 따르면, 홀름스 사무차장은 북한을 비롯해 7개 "위기 국가"에서 구호활동을 펴고 있는 기구에 3천만 달러의 중앙긴급대응기금을 할당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유엔은 CERF 자금을 산하 인도지원 기구와 국제이주기구(IOM) 등에 지원하고 이들 기구가 다시 협력 기관이나 비정부단체에 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세계 곳곳의 구호 프로그램을 돕고 있음. 북한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들도 이 자금을 이용해 식량과 종자 지원, 예방접종 활동 등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800만달러가 북한의 보건, 식량, 농업부문에 배정됐음.

● “北김정일 베트남방문 가능성 살아있다”<RFA>(7/31)

- 베트남 정부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베트남 방문을 성사시키기 위해 북한 당국과 계속 접촉 중이며 북한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이 31일 '베트남 정부와 가까운 워싱턴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 이 소식통은 특히 미국과 적대관계이던 베트남이 미국과 수교한 후 개방정책을 펼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정부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북한이 베트남을 볼 필요가 있다는 관심을 베트남 정부에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 “NAM 선언에 남측 입장 어느정도 반영”(7/30)

- 10·4 남북공동선언의 국제적 지지를 둘러싼 남북의 '외교전'이 벌어져 관심을 모은 테헤란 비동맹운동(NAM) 장관급 회의 선언문에 남측의 입장이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이 회의에 깊이 관여한 테헤란의 외교부 관계자는 30일 전화통화에서 “우리의 입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 회의 전 NAM 정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초안이 재편성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저녁(현지시간) 발표될 선언문에는 '10·4, 6·15 정상선언' 뿐 아니라 6자 회담과 9·19 공동성명 등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성과를 골고루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전했다.
- 김영목 주(駐) 이란 대사는 “10·4 공동선언을 빼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과 남북관계를 종합적으로 NAM 회원국이 이해하도록 하는데 집중했다”며 “북한이 여러 합의와 선언을 이행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고 회원국들도 남측 입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충분히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 외교부는 회의를 주최한 이란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는 데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北, 비동맹회의서도 ‘10.4선언’ 제기(7/29)

- 북한이 이란 테헤란에서 열리고 있는 비동맹운동(NAM) 장관급회의(27~30일)에서 ‘10.4 정상선언 지지’를 합의문서에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는 지난 25일 오준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약실장을 현지에 파견, 합의문서에 우리의 입장이 균형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참가국들을 설득하고 있음.
- 정부 고위 당국자는 29일 “북한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이어 비동맹회의에서도 10.4선언을 합의문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국제회의를 통해 10.4선언 이행에 대한 국제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 정부는 아울러 북핵 2.13합의와 9.19공동성명 등 북핵관련 합의사항도 합의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참가국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부시 내일 한국 향발..亞3국 고별순방(8/3)

- 조지 부시 대통령은 5일부터 11일까지 한국, 태국, 중국 등 아시아 3개국을 순방하기 위해 부인 로라 여사와 함께 4일(미국 동부시간) 출국.
- 부시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지난 6월초 유럽 고별여행에 이어 집권 2기 재임기간에 마지막으로 이뤄지는 아시아 지역 방문임. 먼저 부시 대통령은 5일(한국시간) 저녁 한국에 도착해 하룻밤을 묵은 뒤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
-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핵 및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주한미군 지위변경,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평화정착을 위한 한국의 지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조기 국회비준 동의 문제 등 양국간 현안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임.
- 이어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후 태국을 방문, 사막 순다라벳 태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간 상호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 부시 대통령은 7일 저녁 마지막 순방지인 중국으로 이동하며, 8일에는 베이징 하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 미국 선수단을 격려.



● 한·미, 6.25전사자 유해발굴 협력 강화(8/3)

-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박신한 유해발굴감식단장이 미 합동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사령부(JPAC)와 정례회의 참석차 2일 하와이로 출국했다”면서 “박 단장은 이번 방문에서 도나 크리스습(해군소장.여) JPAC 사령관과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또 김용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박 단장과 함께 하와이를 방문한 뒤 6일 별도로 워싱턴 미 국방부를 찾아 찰스 레이 전쟁포로 및 실종자 업무 담당 부차관보와 실무 차원의 교류·협력을 위한 이번 MOU 체결 뿐만 아니라 양국 국방부 차원의 정책적 교류도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미 JPAC이 체결하는 이번 MOU는 양국의 미수습 전사자의 유해 소재 확인, 발굴에 필요한 정보·자료 제공, 정례적인 공동조사 및 발굴, 전문가 합동 감식, 한국 감식 인력의 실무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음.
- 미 하와이에 있는 JPAC은 태평양사령부 소속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유해 감식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2차대전 지역과 베트남, 동남아시아, 걸프전 지역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문 발굴팀을 편성 운영하고 있음. 유해발굴감식단과 JPAC은 2005년부터 매년 2차례씩 상호 방문을 통한 정례회의를 열고 있음.
- 한·미는 2006년부터 매년 남한지역에서 합동조사와 발굴, 감식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은 유엔군 유해 8구(미군 5구, 영연방군 3구)를 미국에, 미국은 국군 유해 3구를 한국에 각각 발굴·전달했음. 현재 남북한 지역에는 국군 13만여 구, 미군 8천100여 구의 전사자가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첫 여성 주한미대사에 스티븐스(8/2)

-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미 상원이 캐슬린 스티븐스(한국명 심은경) 주한미대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조만간 스티븐스를 주한미대사에 정식 임명할 예정. 이에 따라 스티븐스는 빠르면 8월말이나 9월중 한국에 공식 부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이날 스티븐스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 표결은 해리 리드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인준안 리스트를 제시, 반대가 있는지 질문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인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음. 스티븐스는 1월 22일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주한미대사 후보로 지명받아 4월 22일 상원 외교위원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음.
- 스티븐스는 1975년 충남 부여와 예산에 평화봉사단의 일원으로 파견돼 예산중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한국과 첫 인연을 맺었음. 그는 한국 체류중 지난 1977년 주한미대사관에서 실시한 시험에 합격,



1978년 외교관으로 첫 발을 내디뎠으며 이후 주한미대사관과 부산영사관 등에서 근무한 바 있음. 스티븐스는 이후 유고, 국무부 본부 유럽 및 영국 담당,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북아일랜드 총영사관 등에서 근무했음. 스티븐스는 2005년 6월부터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로 임명돼 북한 핵문제와 한미관계 전반을 챙겼으며 최근까지 국무부 동아태 담당 선임고문으로 일해왔음. 스티븐스는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왔지만 이번에 주한미대사 지명자 후보로 지명된 이후 학원에 다니면서 집중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해왔고 김치를 직접 담글 수 있을 정도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남다른 이해가 있는 것으로 유명함. 한국인 전 남편과의 사이에 아들 하나(제임스)를 두고 있음.

● WFP평양소장 “2주내 한국에 대북 식량지원 요청”(8/1)

- 장 피에르 드 마저리 WFP 평양사무소장은 지난달 30일 중국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의 식량난에 대한 실사 결과를 발표한 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조속히 북한에 식량을 공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그는 특히 “다가오는 몇달동안 식량을 공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추수를 앞둔 시점에서 각 가정의 식량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WFP가 지난 6월 북한에서 8개도, 53개군을 방문해 350건 이상의 면접을 통해 식량수요 조사를 했으며 “2004년 이래 현지실사 중 가장 포괄적인 것”이고 “조사 결과에 상당히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 힐 “적절한 시점, 미군유해발굴 재개”(8/1)

-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3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6자회담 청문회에 출석, “미 행정부는 북한에서 미군 유해발굴 작업이 재개돼야 한다는 한국전 참전용사 및 그 가족들의 열망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힐 차관보는 그러나 ‘적절한 시점’이 언제가 될 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음.
-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2005년 5월 북미간에 긴장이 높아지자 북한 지역에서의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중단했으며 아직까지 재개하지 못하고 있음.

● 부시 “독도갈등 주권국가들이 해결할 문제”(8/1)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최근 한국과 일본의 갈등에 대해 “분쟁의 해결은 주권국가 정부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미국은 대화와 상호이해를 촉진시키는 일은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다.



- 부시 대통령은 내주 한국, 태국, 중국 순방을 앞두고 이날 백악관 루스벨트룸에서 연합뉴스 등 아시아 순방국 언론들과 가진 특별인터뷰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아시아 지역국가들과 좋은 양자관계를 구축하고 역내 국가간에 우호적인 관계를 복돋우려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부시 대통령은 “따라서 한국이 일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강조, 독도문제가 한일간에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했음.

● 미, 독도 표기 분규전으로 원상회복키로(7/31)

-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30일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영유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분규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원상회복토록 지시했다고 이태식 주미대사가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으로부터 독도문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받은 뒤 독도 표기 문제를 원상회복토록 결정, 제임스 제프리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통해 이 대사에게 통보했다고 이 대사는 전했다.
- 이 대사는 “독도 분규가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 한다는 게 결정사항”이라면서 “부시 대통령이 직접 결정을 내렸고, 그것을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 부시 대통령이 이 같은 결정을 즉시 시행토록 지시함에 따라 BGN은 조만간 독도에 대한 표기를 원상회복할 것이라고 이 대사는 밝혔다. 이에 따라 BGN은 독도를 ‘리앙쿠르암’으로 계속 표기하고 영유권은 ‘한국(SOUTH KOREA)’ 또는 ‘공해(OCEAN)’으로 계속 표기되게 됨.
- 이 대사는 “미 정부가 사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 이처럼 신속하게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영유권 미지정 지역(UU)’라는 카테고리에는 계속 존재하지만 독도에는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美NSC “독도, 정치고려없는 전문가 결정”(7/29)

- 미국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 관계자는 자국 지명위원회가 한국령으로 명시됐던 독도를 최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한 것은 전문가들이 정치적 고려없이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 미 NSC 관계자는 27일(현지시간) 주미 한국대사관 고위인사를 만나 이 같이 설명했다. 문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29일 전했다.
- 미 NSC관계자는 “지명위의 독도 영유권 표기 변경은 순수하게 지도학·지리학 전문가로 구성돼 이 결정이 어떤 정치적 파장을 가져올지에 대한 고려가 없는 사람들에 의해 내려졌다”고 말했다고 문 대변인이 전했다.
- 이 관계자는 이어 “절대로 미 정부의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정이



아니다”며 “미국 정부의 입장이 변경돼 표기 변경이 추진됐거나 표기 변경이 미 정부의 입장 변경을 위한 도구로 사용됐다는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그는 “미국의 일관된 입장은 양국 간의 분쟁에 절대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로 인해 양국 간 분쟁이 확산되는 것은 더욱 원치 않는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 건을 주의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 美CIA.의회도서관, 독도 ‘분쟁지역’ 이미 명기(7/29)

- 미 중앙정보국(CIA)과 미 의회도서관 등 미국 정부와 의회 기관들이 ‘독도’를 중립적인 ‘리앙쿠르암(岩.Liancourt Rocks)’으로 표기할 뿐만아니라 ‘국제분쟁지역’으로 명기해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 최근 미 지명위원회(Board on Geographic Names.BGN)가 ‘한국 땅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의 ‘리앙쿠르암’으로 표기,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미국의 공공 기관들이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음이 드러남에 따라 전방위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
- CIA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월드팩트북(The World Factbook)’에서 한국에 대해 소개하면서 ‘국제분쟁(Disputes-international)’란에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MDL),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함께 “한국이 지난 1954년 이후 점유하고 있는 리앙쿠르암(독도/다케시마, Tok-do/Take-shima)을 놓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독도문제’를 언급했음.

나. 한·일 관계

● 日관방, 한승수 총리 독도방문 “부적절”(7/29)

-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일본 관방장관은 29일 한승수(韓昇洙) 국무총리의 독도 방문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음.
- 마치무라 관방장관은 독도 문제를 다룰 한일 양국의 “기본 입장은 한일 관계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차분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라며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한 그러한 행동은 그다지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치무라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한 총리가 독도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왔음.
- 고다마 가즈오 외무성 보도관은 “일본 정부는 이 문제로 인해 한일 관계가 긴장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고다마 보도관은 이어 기자들의 질문에 “균형적인 태도로 대응하는 게 양측 모두에게 매우 중요하며 이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겠다”고 답했지만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았음.



다. 미·중 관계

● 美中, 상대국에 세계 최대 ‘공룡 대사관’ 신축(8/1)

- 미국과 중국이 최근 상대국 수도에 세계 최대 규모의 대사관 건물을 신축했으나 정보원들의 정탐과 도청을 우려해 건물의 주요 특징을 비밀에 부치고 있음.
- 베이징올림픽 개막식 참석을 위해 중국을 방문하는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오는 8일 오전 올림픽 개막식 직전 베이징에서 최첨단 기법으로 건설된 주중 미국대사관 개관식에 참석함.
- 베이징 차오양(朝陽)구 량마허(亮馬河) 주중 한국대사관 바로 옆자리에 새로 들어서는 주중 미국대사관은 넓이가 5만6천㎡로 미국이 전 세계 각국에 건립한 대사관 건물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큼.
- 지난 2004년 2월 착공에 들어간 미국 대사관은 8층 높이의 본청 등 모두 5개 동으로 구성돼 있으며 4억3천400만달러의 공사비가 투입돼 미국 역사상 공사비가 가장 많이 투입된 공관이기도 함.
-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들은 “신축 미국대사관은 중국 정보당국의 도청을 차단하기 위해 사무실 벽면에 유리창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며 “이는 미중 양국의 치열한 정보전의 상징물”이라고 말했다.

라. 기타

● 에콰도르 외교차관 3~5일 방한(7/31)

- 호세 발렌시아 에콰도르 외교차관이 다음달 3~5일 방한한다고 외교부가 31일 밝혔다.
- 발렌시아 차관은 방한기간 신각수 외교부 2차관을 면담하고, 환경부장관 예방, 한국국제협력단 총재 면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면담,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
- 특히 신각수 차관과 발렌시아 차관은 4일 면담에서 자원·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의 협력 등 양국간 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및 국제 무대에서 양국간 공동 관심사 및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 두 장관은 또 면담이 끝난 뒤 양국간 협의채널을 활성화하고 고위인사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한-에콰도르 정책협의회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할 예정.